



## 세무·회계·경영(TAM) 쟁점뉴스 요약

### 車 개소세 내리고, 기업 '접대비 사용한다' 늘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3~6월 기간 동안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도 100만원)한다. 앞서 정부는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1년6개월 가량 시행한 바 있다.

이륜차와 배기량 1000cc 이상 승용차, 2000cc 이상 캠핑용자동차, 전기승용차에만 개소세가 붙기 때문에 이들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의 세부담도 덜어주면서 소비까지 진작할 수 있는 지원책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업무와 관련해 접대·교제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 인정 폭이 넓어진다.

접대비는 기본한도에 더해 연간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비용 인정하는데, 이 비율이 0.03%~0.05% 상향조정된다. 기업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추가로 인정(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현행 0.3%에서 0.35%, 100~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 땀 0.03%에서 0.06%로 늘어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깎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인상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직불카드 공제율은 30%에서 60%로 오른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에서 6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각각 인상된다.

개정 공제율은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근로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쓰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 단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기재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단 유흥주점, 부동산임대 업종은 제외된다. 이 조치로 약 200억원(대상자 17만명)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연매출 66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1년말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대상은 늘고 기간은 짧아졌다.

기재위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개인 사업자는 총 11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 1인당 연 평균 30만원~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제가 배제되는 기존의 업종도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기재위는 이번 대책으로 연 7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전망했다.

### 관세청, 대구·경북소재 수출입기업 특별세정지원 실시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출입기업은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급금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이라도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한다고 밝혔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등에 소재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